

# 與중진회의, 비대·혁신위 정진석에 위임

### 내분 사태 수습책 도출 실패 '혁신 비대위' 구성 공감대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전 정 "조만간 결론 내겠다"

새누리당이 20일 당 내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중진연석회의를 개최했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종료, 당 내분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해 비대위·혁신위 출범 무산 사태로 불거진 당 내분 사태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결과, 중진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서 수습책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중진들은 정 원내대표에게 비대위·혁신위 구성 문제에 대해 다시 전권을 위임하는 쪽으로 어정쩡한 결론만 내렸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와 혁신위 구성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원내대표가 비대위위원장을 겸임할 것이냐의 문제와 비대위를 관리형 혹은 혁신형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또 비대위원장을 내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인사로 할 것인지 문제, 별도의 혁신위원장을 뽑지 않고 전대에 출마하는 대표 후보가 혁신안을 공약으로 내걸어 선박받는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혁신위를 별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혁신위원장이 사퇴해서, 비대위와 혁신위를 투트랙으로 할 지, 아니면 비대위 일로 (혁신위를) 둘 것인지, 아니면 혁신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대에 출마하는 대표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비대위원장을 새로운 다른 분으로 결정하면 그 분에게 전권을 주어서 다시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중진들의 이같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며 "당 정상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어깨를 주물러 드립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7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방송인 송해, 하재현 중사 등 참석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다.

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변인은 정 원내대표의 결정 시점에 대해서 "오늘 내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의견을 들었으니 숙의해서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변인 공식브리핑 내용처럼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양 계파간 내전까지 치른 마당에 중진들마저 격한 주장을 내놓기 힘든 배경 때문이었다.

한신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론 난 것 없다"며 "상임전국위에 올랐던 것처럼 비대위와 혁신위를 투트랙으로 갖겠는지 (혁신위를 없애고) '혁신 비대위' 하나로 갈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이 사퇴했기에, 혁신위를 다시 설치해 분란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중진들의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혁신위 기능'을 비대위에 우겨 넣는 일종의 '혁신 비대위' 구성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서도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는 정기국회 개최 전에 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회의 표정과 관련해서 "격론이 오갈 것도 없다"며 "다 죄인들인데...(중진들이) 많이 왔으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뿐"이라고 전했다.

친박계 중진 홍문종 의원은 "원내대표에게 다 맡기기로 했다"고 결론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모든 사안을 '위임'하기로 하는 결론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직을 겸직하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에게 중진들이 여러가지 이야기했는데 알아서 결정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나는 혁신형 비대위를 일단 해보고, 전당대회를 빨리 치워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자고 했다"며 중진회의에서 조기전대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비박계 중진 이근현 의원은 "모두 자중

자에 해야한다"며 "절대로 그런(분당) 발언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중진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그런 발언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얘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진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없이 정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어정쩡한 결론만 나면서 다시 공은 정 원내대표에게로 남겨진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양 계파 진영이 한 차례 흥역을 치른만큼 정 원내대표가 양 계파의 수장 격 인사들과 막후에서 두루 접촉한 뒤 이번 내분 사태를 통합할 수습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4선 이상 중진 18명(정진석 원내대표 제외) 중 이주영 정우택 원우철 신상진 홍문종 정병국 삼재철 정갑순 이근현 나경원 한신교 의원 등 11명이 참석, 60%의 참석률을 기록했다.

친박계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불참했고, 비박계 김두성 전 대표도 불참했다. 이밖에 유기준 김정훈 조경태 김재경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성주 기자

## 도의회 "누리과정 미해결, 도민에 송구"

전북도의회가 도내 누리과정 예산 과다와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도의회는 20일 "2016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교육위원들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수년간 논란이 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이번에도 편성, 심의·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과 중앙정부의 무책임으로 모든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진 현 상황을 극복할 대안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예산 편성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나 심의 의결의 권한만 있는 우리 의회나, 사태의 원인을 떠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당사자인 학부모와 관계자들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의 판단이 내려진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개원 초 시급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교육위 의원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추경 심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23일부터 '2016년도 도와 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 5조5,269억 원(기정대비 2,625억 원 증가, 4.88% ↑), 도교육청 2조7,945억 원(기정대비 889억 원 증가, 3.30% ↑)의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법정·의무적 경비, 중앙재원 지방비부담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 ▲핵심과제 기반비원을 위한 시급한 예산지원, ▲향후 재정수요를 대비하는 부채감축을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예결특별위는 편성방향의 타당성, 추경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시기의 적절성,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수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이학수 예결특별위원장(정우택)은 "그동안 재정사업장 방문 등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추경예산을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안희정 "난 불펜투수로 몸 만드는 단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0일 "나는 불펜 투수로서 지금도 여전히 연습하고 몸 만드는 단계에 있다"며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거듭된 기자의 질문에 "저는 도지사 선거 때도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금도) 똑같은 연장선상"이라고 답했다.

한편 안 지사는 순회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재판 짜기론'과 관련,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성주 기자

## 鄭의장 "내가 새누리당 로봇이냐"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자신이 '상시 청문회 개최'가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없이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는 새누리당의 반발에 대해, "그것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해서야 안되는 일을 여야 합의 없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직권상정을 한 것이 아니라,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일정을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며 "의장이 (새누리당이 하라는 대로 하는) 로봇가 아니다"고 새누리당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안됐을 때 의장이 아무것도 못하면 꼭 두각시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국민적 인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인사청문회와는 다르다"며 "이것은 정책청문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것은 굉장히 몸을 가볍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두 개 이상의 상임위와 관계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부분은 한 개의 상임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면에서 불필요한 실무책임자인 국정감이 나와 간편하게 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겨냥, "제가 이 법이 통과하게끔 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며 "이미 양당이 합의했고,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를 다 거쳐서 지구심사까지 끝난 뒤 본회의에 왔는데, 정부의 이상한 오해와 과거에 얽매인 생각 때문에 제이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靑, '상시 청문회법' 재개정 추진이나 거부권이나

###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가 국정 발목...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측 · 20대 국회서 개정 움직임

청와대는 20일 여야가 전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격양된 모습이다.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 때문에 국정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된 이 법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보다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상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구도인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합의해도 청문회를 열 수 있어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가슴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 태세다.

그러나 청와대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매일 청문회를 열겠다

는 것인데 이 상태로 가면 국정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작업도 없이 이렇게 느닷없이 해도 되는거냐"며 "당연히 고쳐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의 즉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도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용인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유승민 과동' 때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남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19대 국회 회기가 오는 29일로 끝나는 점에서 법리적 해석과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 이종걸, 개정 국회법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법' 인정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회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법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법 개정을,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어 이 전 원내대표의 발언이 또다른 논쟁을 부를 소지가 있다.

이 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정 국회법 통과와 관련, "어제는 다행히 새누리당의 혼란과 분란 속에서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새누리당도 동참하는 바람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자만에 대한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법을 통과시킨 것을 비꼬는 것이다.

이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봤다. (이번에도 개정 국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말뿐이었다는

### 새누리당 법 개정 시도 ·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명분 준다 지적

것을 피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실망을 주신 게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이 법은 원래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에서 추천된 법이었고 지난해 7월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인데 새누리당이 약속을 안 지키고 무조건 막고 있었다"며 "새누리(법안 내용 중) 청문회 관련 내용을 빼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한 상정을 못한다 해서 6개월 정도 보류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본회의 직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내의 반의회주의자들의 방해 전략을 물리치고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회주의의 승리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19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특히 소신 투표를 해주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 들께는 더욱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전 원내대표가 개정 국회법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법'으로 규정하면서 일각에선 이 법이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내 개정 시도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명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여론에서 이 법에 대한 부정적설정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이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칫 여론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내 상임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 일각에선 사실상 '상시 청문회'를 허용한 것이라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계를 중심으로 국회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본회의 후 취재진에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용인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여야 수석이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오늘 아침에 의사일정에 포함될 것을 보고 놀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계를 깨고 왜 법안을 상정했는지 의장이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성주 기자